

투데이 칼럼

한미위킹 그룹 해체

한미위킹 그룹(ROK-US working group)이 운영 2년 반 만에 결국 종료 수준으로 들어섰다.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한미위킹그룹은 대북 경제와 남북 협력 사안에 대한 한미 실무협의체로 출범했다.

지난 2018년 6월 북미 1차 정상회담 및 4월과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치러진 이후인 11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미국이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구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부를 주축으로 사안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 등이 참여했다. 한미위킹그룹은 그동안 끊임없이 남북관계 장애물 논란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당초 한미위킹그룹은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한국이 남북관계에 주도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그동안 대



정복구

논설위원·통일교육원

한민국에서는 사사건건 내정을 간섭하는 한미위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정상 선언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미위킹그룹은 만들어진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2019년 1월 북한에 지원할 타미플루를 신고 가는 화물 차량이 대북 경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위킹그룹이 제동을 걸었다.

수령 일자가 잠깐 늦어지는 가운데 북한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미위킹그룹이 남북 간 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부상했다.

사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진척 한미위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정상 선언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한미위킹그룹' 해체가 중요한 과제였

다. 미국 눈치를 지나치게 보지 말고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사실 현 정부는 남북 정상 합의의 사항 중 평양 방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 미국의 승인만을 기다린 것이 문제였다. '한미위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의 통일, 자주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위킹그룹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성큼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해 11월 한미위킹그룹을 만들어 남북 관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실무협의체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에 간섭과 방해로 한 셈이다.

지난 2년간 북미, 남북 정상 의사의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데에는 한미위킹그룹에도 그 원인이 상당 부분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합의가 이행되었더라면 남북철도와 남북 도로 연결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한 일이었다.

인도적 분야인 방역보건과 의료 협력 그리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도 성사됐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위킹그룹의 반대로 모두 이행을 중단했다는 비난이 여전하다.

정부는 한미위킹그룹을 '침이사대의 율가미'라고 비판했던 북한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한미위킹그룹 해체 대안으로는 국장급 정책 대화 협의체 신설이 거론된다.

현안 발생 때만 열리는 위킹그룹과 달리, 포괄적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가닥을 잡은 것이다. 물론 국장급 협의체로 격이 낮아지면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독자제언

'알송달송' 노면표시의 의미

우리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지그재그,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등 다양한 노면표시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 노면표시의 의미를 모른 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심코 운전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본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먼저 도로 가장자리에 지그재그로 표시된 차선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표지를 발견하였다면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경사 구간의 도로이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은 역삼각형 표시이다. 주로

합류 구간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 회전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이 표지가 그려져 있다면 상대 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을 양보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합류하여야 한다.

또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지는 5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 표지로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이므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주의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노면표지,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습관이 사고 예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윤정 무주경찰서 교통조사회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형 나눠주며 구조대 응원하는 자선단체 회원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루터 교회 자선단체 회원들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소방관들에게 테디 베어 인형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구조대는 붕괴 현장에서 생존자가 아닌 사망자 유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철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설

국가 재정과 통화정책 문제

정부의 재정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정책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무려 33조~35조원 규모로 집합 전망이다.

반면 중앙은행은 돈을 조이기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내린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 은행들은 이미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 한도부터 손보기 시작했다.

농협은행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한도를 늘려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 금리를 높이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미 개인 신용대출 5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5%p 낮췄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

가율을 5~8%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1분기에 이미 9%를 넘었다.

여기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졌다. 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 돈을 조이기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상충하는 면이 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소비 폭박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현금성 지원까지 더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다. 이는 한은의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미스매칭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재정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게 정교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소비 진작은 백신을 통한 감염 확산 통제로 대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원팀 맞나

전북 정치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도내 민주당 당선자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원팀을 외쳤다. 모두 하나가 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0대 총선에서 도내 10석 가운데 겨우 2석을 건지면서 참패했던 기억을 떨쳐내고 도민에게 단합된 모습으로 다가서려는 각오였다. 그러나 이 다짐은 이미 빛이 바랜지 오래다.

이제는 그나마도 산산조각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어느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도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며 모든 당직을 시켰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이 문제를 삼은 건 위원장이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위원회이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운영에 대해서 협의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당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해당 의원은 "위원장이 현안을 논의하자며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소집을 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속 빼놓았다"며 반발한다.

정작 중요한 당무나 안건들은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이다.

도당은 분열 조짐을 보이자 긴급 모임을 갖고 선출직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구성 과정이 정치권과 논의 없이 이뤄졌던 점 등을 사과하고 평가위를 재구성기로 했다.

지난 2월 전라북도도의 정책협의회에 민주당 의원이 겨우 3명만 참석하는 촌극이 발생했던 것도 불협화음(不協和音)의 산물이다. 도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10석 가운데 9석을 민주당에 물어줬다.

그러나 구심점도 역동성도 없어 지역 현안은 출몰이 터져거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도당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현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불려 지역 현안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boat on water and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quot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nd a list of services: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It also mentions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